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김시라
서정대학교 주임 강사

A study on the Approaches for Social Integration through Overcoming the Migrants' Social Exclusion

Si-Ra Kim

Head Instructor, Seoje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증가하는 이주민과 더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많은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착안하여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 관련 법제도를 재개정하여야 한다. 이주민의 증가로 각종 법제도적 제정은 물론 관련법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이주민은 자신들의 문화적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하며, 정주민들과 동등한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게 해야 한다. 둘째,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극히 일부만 열려 있는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될 때,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한걸음 진전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해야 한다. 이의 전제로 이주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제가 극복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민은 정주민에 비해 사회적 배제가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공존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회적 배제가 극복되어야만 사회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

주제어 이주민, 사회적 배제, 사회통합,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overcome the social exclusion experienced by migrants in Korean society and achieve social integration, focusing on the fact that social exclusion continues in many fields alo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 related to migrants must be enacted and revised. As the number of migrants increases,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enactments as well as reorganization of related laws are inevitable. Immigrants should be allowed to overcome social exclusion so that their cultural uniqueness and value are recognized and preserved, and they are given the same qualifications and abilities as the residents. Second, migrants' political participation must be guaranteed. Whe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migrants, which is currently only open to a small part, is guaranteed, Korean society can be seen as progressing one step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Third, residents and migrants must coexist. As a premise of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ground where social exclusion can be overcome so that migrants can coexist. Immigrants should be able to develop a relationship of coexistence in the reality that social exclusion is progressing in each field compared to permanent residents. In conclusion, in order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s to settle in Korean society, social integration can be achieved only when social exclusion imposed on immigrants is overcome.

Key Words Migrants, Social Exclusion, Social Integration, Marriage Migrant Women, Foreign Workers

Received 14 Jun 2023, Revised 23 Jun 2023

Accepted 03 Jul 2023

Corresponding Author: Si-Ra Kim
(Seojeong University)

Email: kimkiss7001@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한국사회는 전 지구적으로 빠른 속도로 세계화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유입이 활기를 띄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만 여명이 넘어섰다(법무부, 2023)[1].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국 드라마, 웹툰, K-POP 등 K-콘텐츠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이미 입국을 예정하고 있는 외국인인 물론, 세계적으로 장래 한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미숙, 2023)[2].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상품뿐 아니라, 사람과 문화까지도 국경을 넘나드는 추세가 가속되고 있어서 인종·종교·문화갈등과 대립을 방지하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며, 증진시키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세계는 빈부격차의 확대, 종교 분쟁 등 문화다양성의 위협에 직면해 있어서, 소통하고 문화다양성을 인정하여 이런 세계화로 인한 문화발전이 정체할 위험으로부터의 해결이 세계 각국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박화상, 2023)[3].

미국이나 캐나다는 국가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형성되었다. 유럽에서도 여러 문화가 유입되어 형성된 국가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이주 집단 간 상이점을 해소하고, 평등한 노동, 고용, 교육을 통한 기본적인 자질을 키워주는 조치를 통해 경제적 사회통합 개선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배경임 외, 2022)[18].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과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에 따른 결혼이주여성 증가, 그리고 북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현재는 물론 향후 겪게 될 이주민들의 정착에 따른 사회적 배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이주민과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민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

2.1 사회적 배제의 일반적 개념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 즉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배제형태를 말한다(이척희, 2020)[4]. 따라서, 배제에는 각 분야별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참여의 봉쇄를 강조할 때 정치적 배제,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차별을 받을 때 경제적 배제, 사회적 소외로부터 오는 사회관계적 배제,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 문화적 배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수진, 2019)[5]. 여기에서 보듯이 배제의 개념은 ‘어떤 것’으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한다. 대개의 ‘통상적’이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제라는 개념은 ‘사회적 위험의 총체성’의 성격을 가진다(김현옥, 2022)[6]. 따라서, 기존의 빈곤(poverty)이나 불평등(inequality)의 개념으로부터의 확장이라는 협의의 개념을 시작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인간의 기본권까지 관련된 광의의 개념으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다.

기든스(Giddens, 2021)[7]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개인들이 사회에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교육시설은 낙후되었고, 고용기회가 거의 없는 빈민구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운 좋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의미도 함축하는 것으로서, 주변화된 집단(marginalized groups)을 사회적으로 포섭하는 노력은 현대 정치 아젠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되는 방식은 사회마다 다양하게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2 이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일반적인 태도는 다음과 같다(김병조 외, 2015)[8].

우선, 사회적 소수자(사회문제)와 외국인 이주민(이주민문제) 간 태도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보면, 일반적 사회문제와 외국인 이주민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비교를 통해 외국인 이주민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 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일종의 감정적 태도로서의 사회적 거리감 정도와 그들의 정치적·사회적 행동에 대한 행동적 태도로서의 용인 정도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정도와 비교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감정적·행동적 수용수준을 알 수 있다.

2.3 사회적 배제의 사례

이주라는 생활사건은 개인이 경험한 바 없는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과 통합이라는 과제를 남긴다. 이주민의 삶을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살펴야 할 이유를 논의하고, 이주민의 사례적 배제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최혜지, 2019)[9].

이주민문제의 핵심은 선주민보다 낮은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지위에 있다.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은 이주민이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의사결정체계로부터 소외된 결과이다. 이주민을 향한 편견과 왜곡된 고정관념은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기회의 부당한 분배를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작동하여, 권리주체로서 이주민의 동등성을 부정한다. 이와 같은 구조화된 차별로 인해 이주민의 시민적 권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약되곤 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는 이주민 삶의 질을 저하하고 사회구성원 간 불평등을 심화하여 사회안정과 통합을 위협하므로 이주민의 구조적 차별을 근절하고 자기발전의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원인으로서의 사회적 차별과 결과로서의 불평등, 그리고 지향하는 이상으로서 사회통합을 관통하는 주제는 사회적 배제이다. 즉, 사회적 배제는 민족적 소수자의 불리한 처지의 주요 원인이며, 기제이고 또한 결과이다.

사회적 배제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경로에 집중함으로써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파악하게 한다. 이와 같이 이주민이 경험하는 삶을 사회적 배제의 관점으로 조명함으로써 이주민의 불평등을 주류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는 다차원적 기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3.1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함과 동시에, 출신국과는 상이한 사회문화적 환경하에서 생활하게 된다. 물론 중국, 베트남, 일본 등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한국과 유교적 전통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 국가 역시 한국과 사회문화적 속성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이주 초창기에는 한국의 사회문화

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순양, 2013)[10].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들이며, 이들의 주요 결혼이주의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타인에 의해 자신의 결혼 생활 선택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빈곤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적 차원과 언어상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적절한 경제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즉, 경제적 배제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김보기 외, 2020)[11].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주거상태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상태가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들의 교육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교육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자녀들의 교육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대다수가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전·월세로 생활하는 비율이 높으면,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는 다시 한국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사회적 배제 극복을 어렵게 할 것이다.

2.3.2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는 1990년대 이래 이른바 3D업종 중 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출신들로서, 초기에는 산업연수생제도로 입국 하였으나, 불법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인권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김춘수, 2022)[12]. 현재 외국인근로자들은 작업현장에서 노동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은 물론, 사회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보기 외, 2020)[11].

2.3.3 북한이탈주민

북한주민들의 상당수는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적 배제 직면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다수는 남한의 사회문화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장인실 외, 2022)[13].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였으며, 입국 이후에는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배타성과 차별, 실업,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정책의 허점, 북한이탈주민 측면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김보기 외, 2020)[11].

정부의 무상주택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주거와 관련하여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입국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영구입대주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거와 관련한 교육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어렵다(김보기 외, 2020)[11].

3. 사회통합

3.1 사회통합의 일반적 개념

현대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갈등이 발생함으로써 사회통합의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통합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사회구성원이 정체성을 갖도록 통합하는 일이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과 대립이 폭동과 소요로 나타나게 된다(박화상 외, 2023)[3].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대립적 갈등을 조정·해결하려면 각각의 영역에서 사회통합 역할이 다음과 같이 강조된다(박동욱, 2022)[14]. 첫째, 사회복지국가 헌법의 이념 및 가치 추구를 통한 사회통합, 둘째, 사회정의 실현의 정치를 통한 사회통합, 셋째,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헌법재판을 통한 사회통합, 넷째, 세대 간 갈등 조정·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의 헌법적 의무를 통한 사회통합 등의 역할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통합은 지역 갈등, 진보와 보수 간 이념 갈등, 세대, 소득과 부의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갈등에 대해 통로를 만들어 수렴하고,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일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3.2 사회통합의 필요성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상품뿐 아니라, 사람

과 문화까지도 국경을 넘나드는 추세가 가속되고 있어서 인종·종교·문화갈등과 대립을 방지하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며, 증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세계는 빈부격차의 확대, 종교 분쟁 등 문화다양성을 위협하는 일에 직면해 있어서, 소통하고 문화다양성을 인정하여 이런 세계화로 인한 문화발전이 정체할 위험으로부터 해결하는 일이다. 이는 사회적 배제의 극복을 의미한다(박화상 외, 2023)[3].

미국이나 캐나다는 국가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형성되었다. 유럽에서도 여러 문화가 유입되어 형성된 국가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이주 집단 간 상이점을 해소하고, 평등한 노동, 고용, 교육을 통한 기본적인 자질을 키워주는 조치를 통해 경제적 사회통합 개선계획을 추진하고 있다(Giddens, 2021)[7].

3.3 이주대상자별 사회통합정책

한국사회에 나타난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3.3.1 외국인근로자

한국은 1987년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송출국 위치에서 외국인근로자 유입국으로 전환되었다. 국내 노동력 부족 해결을 목적으로 1991년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를 시행하였고, 1992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잠정적 입국을 허용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소지 등 입국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될 동안 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배경임, 2022)[18].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외국인근로자들의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사증발급 시 국내 고용환경이 고려되도록 하는 사안과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체류상한기간 재조정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본격화되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은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최장 근로기간을 5년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정주불허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단기계약으로 입국하며, 정해진 직종에만 취업

이 가능하고, 사업자 변경 및 가족재결합이 불가하다(김춘수, 2022)[12].

3.3.2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그 체류자격은 2011년부터 거주(F-2)에서 결혼이민(F-6) 자격이 신설되었으며, 한국국민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자격에서 2년이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이민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이민비자를 발급받는다. 외국인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필요하다.

3.3.3 재외동포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들과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에 연관되어 있으며, 재외동포 및 영주권자 유형과 방문취업제 대상자의 유형이 뒤섞인 상태로 그 신분과 지위가 불안정하다.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 우대를 규정하는 것으로, 중국, 소련 등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즉 현실적으로 가장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많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법률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을 중국동포가 차지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후 2004년 동 법률이 개정되어 드디어 200만 명의 중국동포, 50만 명 CIS(구소련,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지역 동포가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4. 사회통합 방안

이주민들의 사회적 배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민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인종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다문화가족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정책이나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사회통합을 위한 각종 정책이나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김진열 외, 2019)[15]. 그러나 특히 사회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다문화가족들이 국내에서 적응하는 것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나, 사회적 배제라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각 부처 소관 법률들은 정책목적이 각 행정관리 정책에 산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김병조, 2015)[8].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보장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기본적인 법 제도의 정비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인 까닭에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을 배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박화상 외, 2023)[3].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통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주민들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주민의 권리인정 측면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선진국가에 속하지만, 이주민들에게 정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모순되는 상황이다(최혜지, 2019)[9]. 이러한 정치적 배제는 이주민이 정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외국인 선거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사항을 보면, 국경선거와 지방선거를 구분하고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구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정당가입이 허락되지 않고, 정치자금 기부도 금지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경향신문, 2023)[19]. 정치활동의 자유가 없는 이주민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단체를 결성할 수 없다. 다만, 정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영주권자에 한해 지방의회 선거권만 주어진다(이정은, 2021)[17].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활발할 때, 이주민은 한국사회에 훨씬 빨리 동화될 수 있으며, 사회통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셋째, 정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해야 한다.

다문화사회의 정주민은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등을 경험하면서 이주민이 정주민들의 문화와 생활양식이 존중받을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이주민 정착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반면에, 이주민은 자신들의 문화적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하며, 정주민들과 동등한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음으로써 주류사회(mainstream society)에 진입하고자

한다(김춘수, 2022)[12]. 따라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의 정체성 협상과정은 문화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정주민과 소수의 이주민 사이의 문화다양성의 공존으로 새로운 다문화 생활세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으로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은 사회적 배제로부터의 탈피, 기존 단일민족 신화를 넘어서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정체성 협상과정을 통해 다문화사회 공간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야 한다.

5. 결론

한국사회는 이주민이 200만 명을 상회할 정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증가하는 이주민과 더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많은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착안하여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민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이주민의 증가로 각종 법제도적 제정은 물론 관련법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즉, 국가는 다문화사회를 세계화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선진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통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될 때,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한 걸음 진전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방선거에만 참여가 가능한 데, 이는 정치적 배제에 속하며, 이를 보완하고 확장하여 이주민들에게 한국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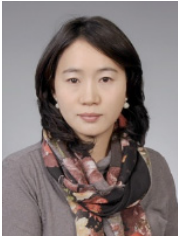
셋째, 정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해야 한다. 이의 전제로 이주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제가 극복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민은 정주민에 비해 사회적 배제가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공존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회적 배제가 극복되어야만 사회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3). 『연도별 내·외국인 출입국자 추이(’18~’22년)』.
- [2] 고미숙(2023).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한국사회 이해』 과정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박화상 외(2023).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서울: 박영스토리.
- [4] 이척희(2020).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의 경제적 배제의 극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방안 연구”. 『산업진흥연구』, Vol.5 No.1 : 125-136.
- [5] 김수진(2019). “사회적 배제, 가정생활스트레스, 우울의 종단적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김현옥(2022).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의 경제적 배제 극복을 통한 인간관계만족도의 향상에 관한 연구: 사회관계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세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Giddens, A.(2021). Sociology (9th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 [8] 김병조 외(2015).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9] 최혜지(2019).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 서울: 집문당.
- [10] 김순양(2013).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방인』, 서울: 집문당.
- [11] 김보기 외(2020).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서울: 동문사.
- [12] 김춘수(2022). 『이주와 노동』. 경기: 한국학술정보.
- [13] 장인실 외(2022). 『다문화교육』. 서울: 학지사.
- [14] 박동욱(2022). “사회통합과 헌법: 국민연금의 헌법적 의무를 포함하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김진열 외(2019). 『한국사회 다문화현상의 이해』. 서울: 높이깊이.
- [16] 김태수(2009). 『한국사회의 외래인 배제』. 경기: 인간사랑.
- [17] 이정은 외(2021).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경기: 지식공동체.
- [18] 배경임 외(2022). 『다문화 사회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경기: 공동체.

김 시 라(Si-Ra Kim)



- 2019년 3월~2021년 8월: 신한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9년 10월~현재: 서정대학교 주임 강사
- 2017년 1월~6월: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 2016년 5월~12월: 국립하노이대학교 외래교수
- 2013년 4월~2014년 2월: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역임
- 2023년 6월 현재: 글로벌 다문화복지연구소 대표
- 관심분야: 베트남 외국인 유학생 컨설팅, 한국어, 다문화, 심리학
- E-Mail: kimkiss7001@naver.com